

M&A 호재 미리 알고 매매… 금융전문가들 200억 부당이득

주가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서울대 동아리·컨설팅회사 인연 가족·지인 등 포함 10여명 연루
근무지·자택 등 20여곳 압수수색
최대 2배 과징금 등 후속조치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전문가들이 수년간 상장사의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유하고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포착됐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9일 M&A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으며,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정회사 등에서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혐의자는 5명 내외로, 연령대는 30~40대로 알려졌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장사는 5곳이며, 정보 이용 행위는 5~6차례 이상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들 가운데



황선호 주가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장이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 기자실에서 합동대응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일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가족·지인 등을 포함한 전체 연루자는 10여명 수준으로, 압수수색과 후속 조치를 거치면서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날 황선호 주가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장은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정보 카르텔 내에서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고,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며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다수 종

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최근 약 5년간 지속적으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본인들이 직접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대응단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와 가족·지인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200억원을 넘어선다.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이나 M&A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인 만큼,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

본시장법상 금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이 처음 포착됐다. 합동대응단은 여러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래와 동일인의 반복적인 연루 정황을 토대로 정보 취득 경로와 공유 관계를 추적했으며, 올해 5월부터 관계기관 공조 아래 조사를 이어왔다.

특히 한 종목에서 발생한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앞서 적발한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참고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건 모두 금융·자본시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발생했고, 여러 종목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반복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월 공개매수 주관사인 NH투자증권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 해당 혐의자를 고발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두 사건은 별건이지만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는 부분이 공통점”이라며 “NH투자증권 사건은 주관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라서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혐의자의 정체와 정보 취득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추적

해왔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에 앞서 계좌 추적과 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들의 거래 내역과 인적 관계를 분석해 정보 취득 경로와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은닉을 막고 향후 환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분석해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서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치를 완료하고, 이번에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정보 카르텔 세력을 적발했다”며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이찬진 “증권사 실적 늘 때 투자자는 손실”

(금감원장)

23개 증권회사 CEO와 간담회 개최 주주환원·투자자 실질적인 교육 강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실적 증가에 걸맞은 주주환원과 투자자 보호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3개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증권사는 계속 이익을 누리는데 정작 존립기반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뒀다. 그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증권산업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업계와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가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인 만큼 주주 가치 제고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가 자사주 소각 등에 나섰지만 시장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배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과 주주환원에서 일반 기업에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지난해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결 기준 현금배당성향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0%다.

사회공헌 수준도 짚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사회공헌활동 사업비는 잠정 500억

원으로 국내 은행의 2조2000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증권사 37곳의 당기순이익은 8조6000억원으로, 은행 20곳의 13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사회공헌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법적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엔비디아, 자사주 1500억달러 추가 매입

美 기업 역대 최대 규모

엔비디아가 1500억달러(약 204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했다. 한 번에 승인한 자사주 매입 규모로는 미국 기업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주환원도 동시에 강화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는 28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기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1500달러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자사주 매입 한도를 800억달러 확대했던 만큼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추가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엔비디아가 향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금액은

기존 미사용분을 포함해 총 2350억달러(약 320조원)로 확대됐다. 추가 승인 규모만 놓고 보면 애플이 2024년 5월 발표한 1100억달러를 넘어선다. 엔비디아는 해당 프로그램을 2028 회계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시장에서 자사주식을 사들여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의 주주환원 정책이다. 매입 규모와 시점에 따라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가 부양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신하은 기자

ISA 1000만명 돌파… 올해 205만명 증가

가입금액 76조5000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20만명 넘게 늘었고, 가입자의 약 90%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투자중개형을 선택했다. 절세 혜택을 받으며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ISA 확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ISA 가입자는 1005만명, 가입금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3월 도입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 약 4407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1명에 가까운 23%가 ISA 계좌를 보유한 셈이다.

지난 1월 말 가입자가 800만명을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205만명이 추가로 가입했다. 월평균 약 29만명꼴이다. 같은 기간 가입금액도 약 55조원에서 76조5000억원으로 20조원 넘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코스피 상승과 주식시장 참여 확대가 ISA를 통한 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는 897만5000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했다. 금융업권별로 증권사 가입자가 900만5000명(89.6%)으로 대부분이었다. 투자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반면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신탁형 가입자는 92만2000명(9.2%)이었다.

/허정윤 기자

신한투자증권, 장애인·1인가구 신탁 출시

의료비·교육비 등 정기 지급 가능

신한투자증권은 장애인과 1인가구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와 재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 신탁’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겨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탁계약에 따라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식·상장지

수펀드(ETF)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고객 상황에 따라 가족, 친족, 후견인 또는 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상담할 수 있다. 지정된 관계인은 승인된 권한 범위 내에서 생활비 지급 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원(2027년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탁 가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및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필요하다.

/신하은 기자